



# 허구에 짓눌렸던 방폐장 대책 사업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 노무현 대통령이 하소연한 숙제

금년 들어 두 번이나 국회의원 재선거(4-30, 10-26)를 치루면서 ‘열린우리당’은 무참할 정도로 참패했다. 민심은 천심으로 통한다. 천심은 노무현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이끌도록 두 번이나 경고한 것이다. 두 번째의 선거가 끝난 뒤 다음날 노 대통령은 “재선거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두 번째 선거 직후, 노 대통령은 오랜만에 국정에서 힘겨운 숙제들을 3가지로 요약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 중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두 번째의 난제임을 토로했다. 다른 첫째는 국민연금, 그리고 마지막은

노사 관계로 알려진다.

그런데 2005년 11월 2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대통령도 혀를 내두른 하나의 난제가 왜도난마로 풀렸기 때문이다.

장장 19년 동안 방폐장 설치 문제는 많은 지역들에서 술한 선량한 민심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런 갈등이 이번에도 계속되리라던 의구심은 주민 투표 결과를 통해 말끔히 씻겼다. 유치를 신청한 4곳(경주, 포항, 영덕, 군산)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졌고, 경주시가 다른 곳보다 투표율은 뒤졌지만, 찬성률이 가장 높은 89.5%를 얻어 군산의 84.4%를 눌렀다.

전에도 정부는 여러 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결정이 전과 다른 점은 정부가 큰소리치면서 자신있게 내린 결정을 두

고 뒷말이 없다는 점이다. 머리띠를 동여맨 환경 단체의 증증 시위대는 없었다. 뿐만 아니다. 폭발하고 수천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던 얘기도 일체 없었다. 주민 투표 앞에 전 상투적으로 일삼던 그런 얘기들은 허구였음이 명백해졌다.

우매한 군수 그리고 민첩한 시장

2년 전, 원전센터 유치 지역 공모를 발표했을 때 있었던 한 토막의 일화다. 본인 고향인 울진 그리고 인근 군 영덕은 방폐장의 후보지에 정지로 정부가 미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모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울진군수는 날벼락을 맞은 사슴처럼 놀라서 포항으로 단숨에 달려갔다.

동해안을 낀 6곳의 지자체장들이 급히 거기 모였다. 경북 동해권 행

정협의회(회장 포항시장 정장식)란 한 기구가 급조됐다. 그들은 긴급한 국가의 정책 사업이던 원전센터 부지가 동해 지역으로 옮겨 봐 두려워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백상승 경주시장도 그들과 함께 서명을 하였다. 울진군수가 제의했던, '경북 동해권 6개 시장군수 핵폐기장 반대 성명(2003년 3월 7일, 포항시청)'은 다음을 결의했다.

“경북 동해안은 가장 깨끗한 해수욕장과 수산물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울진과 월성에 원전이 설치돼 지역민들이 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내하며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해 왔다. 정부가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영덕과 울진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백상승 경주시장도 그때까진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던 지자체장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후론 변신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울진군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나서, 중앙일보(11월 7일, 29쪽)와의 한 인터뷰에서 변신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마장 그리고 태권도공원 유치에서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책 사업과는 인연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한 말로 가슴에 담고 있었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런 국책 사업 유치 실패 경험을 가슴 속에 품고 이번 방폐장 공모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민들 앞에 결연히 섰다. 환경 단체들이 아주 즐기던, 군중 심리전을 방불케 한 포폴리즘 전술을 역으로 들이댔다. 삭발된 모습으로 주민들 앞에서 외치다 지쳐 경주역 광장에 팔다리를 쭉그려 움츠리고 앉았다. 그리고 성명서를 내고 단식을 시작한다. 방폐장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역 신문들은 “방폐장 유치에 목숨을 건 경주시장”이란 헤드라인 뉴스를 보도했다. 백상승 경주시장의 성명서는 그를 현장으로 내몬 사연을 먼저 담았다. 그리고 경합하던 한 곳의 주민 정서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히 한 기자에게 그의 심경을 토로했다.

지역주의까지 역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자신의 달마를 결심했던 것이다.

“만약 정부가 특정 지역 편들기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방폐장을 선정한다면 이미 가동 중인 원전뿐 아니라 공사에 들어간 신월성 1·2호기 등 경주에 있는 원전 시설 철거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농성장엔 경상북도 이외의 지사도 찾아와 격려했다.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성명서가 결연하게 발표했다.

사즉생의 교훈 -  
용기는 지도자의 필수 덕목

전쟁은 적과 아군으로 가른다. 대승의 배경에는 반드시 적의 도움이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승리는 핵폭탄이었다. 미국의 핵폭탄 개발은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계 과학자들에 의하여 시동이 걸렸다.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전략으로 미국으로 피신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예측했고, 죽자 살자 루스벨트 대통령에 매달렸다.

드디어 “아군이 만들 수 있는 무기는 적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루스벨트 대통령에 심어주었다. 평소 세계 평화를 원하던 대통령도 세계가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미국이 히틀러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이다.

“죽을 각오로 일을 도모해야 산다(死即生)”는 지혜를 백상승 시장은 깨달았다. 전에 울진군수를 포함한 동해안의 지자체장들이 모두 담합해서 방폐장을 반대한 목소리를 경주시장은 거두었다. 그에 견준다면, 울진군수는 너무나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방폐장이 갈 곳은 울진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비전 없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



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다.

경주시장만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작심한다. 앞장서 삭발까지 하면서 원전센터 유치를 지휘했다. 참으로 묘한 장면이 정치판 현장에서 재현된다. 당초 주민 10% 정도가 방폐장 유치를 원하던 분위기였다. 주민 70.8%의 투표율, 그리고 찬성률 89.5%의 놀라운 힘은 죽음을 각오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대가일 것이다.

왜 내 고향 울진은 그 같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문다. 원전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 알량하고 알맞던 울진의 자존심은 별도로 없이 신라의 고도인 세계 문화 유산지에 넘죽 절을 올리면서 감사해야 한다. 고향에서 '사형 선고'란 전제를 달던 저들에게, 경주시는 저들을 살려준 은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소수이던 저들과는 달리, 다수이던 울진 주민의 75%가 유치를 희망하면서 애향을 부르짖던 그들 틈새에 끼여 따르던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아쉽고 가슴이 답답하다. 손으로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쳤더니, 온 몸통이 쓰리고, 속은 분통이 치밀려 참고 견뎌내기 역겨울 지경에 이른다. 울진군과 같은 원자력발전소 집단지에 정부 지원이 많은 방폐장을 유치했다면,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동해안에 첨단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경북도의 꿈인 '동해안 발전 계획'은 이번 일로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게 됐다. 원전대, 경주시의 발전 동력이 동해안을 거슬러 올라와서 내 고향 울진까지 그 영향이 미칠길 바랄 뿐이다. 그건 내 쪽의 희망일 뿐, 그 사업의 주체가 될 뻔했던, 그렇게 지나 깨나 소망했던 원전대하던 꿈을 접고 나니, 못내 아쉽기만 하다.

보물 단지 방폐장을 품에 안은 경주

방폐장 부지로 지정된 경주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과다하리만큼 큰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 특별 자금 3천억원, 한수원 본사 이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들이 한 묶음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산 유발 효과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말에 방폐장 예정 지구를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건설 허가, 그리고 실시 계획을 함께 승인 받아 시공 회사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 정부는 방폐장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하여 2007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공하게 될 것이며, 2009년부터 원전 쓰레기들을 저장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확보될 토지는 30만~60만 평으로 예정돼 있다. 중저준위 원전 쓰레기는 200 리터짜리 드럼통 속에 담아 밀봉 처리한 것이 한 단위가 된다. 지난 달 기준으로 이미 포장된 드럼통은 7만개나 쌓여 있다. 이대로 생겨난다면, 5년 이후면 약 10만개에 이를 것이다. 경주에서 건설될 방폐장 시설은 앞으로 60년간 국내 4개 원전본부들에서 생겨날 약 80만개를 차곡차곡 쌓아갈 규모가 될 것이다.

맨 땅을 파서 방수 처리하여 빗물에 씻겨나지 않게 잘 관리할 그 같은 처분 방식을 '천층 처분'이라 한다. 그런 쓰레기는 앞으로 약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 핵종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그때까지 국가가 엄히 관리해야 한다. 연간 쓰레기의 반입 수수료는 평균 8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60년 × 85억원/년=5,100억 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 한 말로, 봉을 잡은 경주이다.

아직도 예년처럼 상습적인 이상한 후유증들은 나타나고 있었다. 중저준위를 가둘 방폐장의 유치 기준으로 실시했던 주민 투표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린다. 이들에 따른 소송들이 제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책 사업이란 대전제를 두고 큰 통으로 바라볼 때, 한 잡음에 불과할 것이다. 한 결혼 예식장에서 성혼이 된 부부를, 연회장에서 술주정으로

일어난 불상사가 그 성혼을 무효로 이끌지는 못한다.

**‘태운 원전 연료’를 처분할 장소**

이제 남은 방폐장의 또 다른 숙제는 태운 원전 연료봉들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 선정이 남았다. 흔히 말하기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사용후 핵연료’란 용어들로 일컬어진다. 본인에게는 그런 용어가 아주 잘못된 것이어서 못마땅히 여긴다. 중저준위 개념을 확대시켜 그보다 짙은 방사능의 농도 개념으로 보자면, 잘 조화를 이룬 표현일 듯하다. 하지만 태운 원전 연료봉들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용한 희유 금속들이 들어 있어 미래 자원의 한 보고(寶庫)로 알려진다.

이런 고급 자원을 쓰레기로 버릴 ‘폐기물’ 개념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에도 모순이 따른다. ‘태운 핵연료’라고 바꿔 써보자. 원자력과 핵력은 물리학에서 약력과 강력의 차이만큼 다른 것이다. 원전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상징적인 에너지이고, 핵력은 강력으로서 파괴를 위주로 한 핵폭탄을 뜻한다. 앞으로 이런 수사학적으로 나타나는 모순들은 바로 잡혀야 될 것이다.

용어가 어떻든, 내년부터 이들을 처분할 정책 방향이 잡힌 듯 하다.



장장 19년 동안 방폐장 설치 문제는 많은 지역들에서 숭한 선량한 민심들을 상하게 했다. 그런 감동이 이번에도 계속되리라던 의구심은 주민 투표 결과를 통해 말끔히 씻겼다. 앞으로 국책 사업은 주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우리 환경 단체도 수궁하면서 원원 전략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산자 “고준위방폐장 내년부터 논의”(중앙일보 2005년 11월 4일자, 4쪽)」 헤드라인 보도가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조건에 버금갈 인센티브 조건으로 공모할 것이란 예상을 할지도 모른다. 전문가의 시각으론 ‘NO’이다.

불필요하게 정부는 중저준위 쓰레기터미에 너무 과중한 인센티브를 걸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11월 3일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기 표류 국책 사업에 방폐장 해법 검토”(한국경제, 2005년 11월 4일, A4쪽)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 투표를 왜도 난마의 위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들이야 따지를 걸 논리로 지금까지 활동했고, 변할 줄 모르는 그들은 투쟁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만을 늘어놓았다. 방폐장 문제는 내 틀 안에 혐오 시설을 놓겠다는

것인데, 남들이 안된다고 우겨댄다. 씩 웃어넘길 일에 우리 19년 동안 술하게 국가 에너지를 낭비했고 허송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쓸개 빠진 일이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에 환경 단체들의 고차원적인 철학과 명분은 어딘가 숨고 말았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환경 단체들이 머리띠를 동여맨 중증의 시위대는 없었다. 뿐만 아니다. 폭발하고 수 천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던 얘기도 일체 없었다. 주민 투표 앞에서는 전에 상투적으로 일삼던 그런 얘기들은 허구였음이 명백해졌다.

앞으로 국책 사업은 주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우리 환경 단체도 수궁하면서 원원 전략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그런 바탕을 마련한 패러다임으로 그 뜻을 되새기자. ☻